

중국 전략

미·중 정상회담:관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 향후 협상이 관건

분석의 기본가정

- 미·중 관세 인하 합의는 긍정적 신호이나 실제 영향은 제한적
- 미·중 관세 연장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추후 협상 중요

미·중 정상회담: 관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 향후 협상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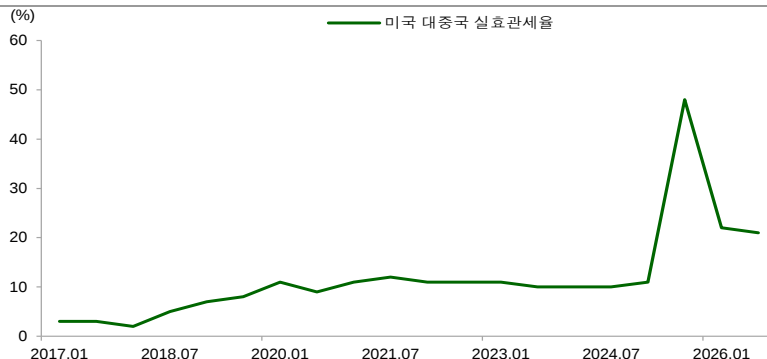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발표

지난 9월 24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우대) 권고안에 합의했다(25일 미·중 정부 공식 발표).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확정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2월 1단계 무역합의 이후, 미중 양국이 구체적인 상품 규모와 상설 협의 체계를 결합한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8일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발표했으며, 그중 90% 이상은 최혜국대우(MFN)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세 인하는 양국이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측 관세 인하 대상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개인 관리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이 포함됐다. 미국 측은 중국산 완구와 가전제품, 유아용품, 주방·욕실용품, 명절 선물용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단계적 무역 합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이 비민감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지만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비민감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가 민감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세 유예 기간이 2027년 1월 10일까지로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0월 말 중국 5중전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추가적인 관세 조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2026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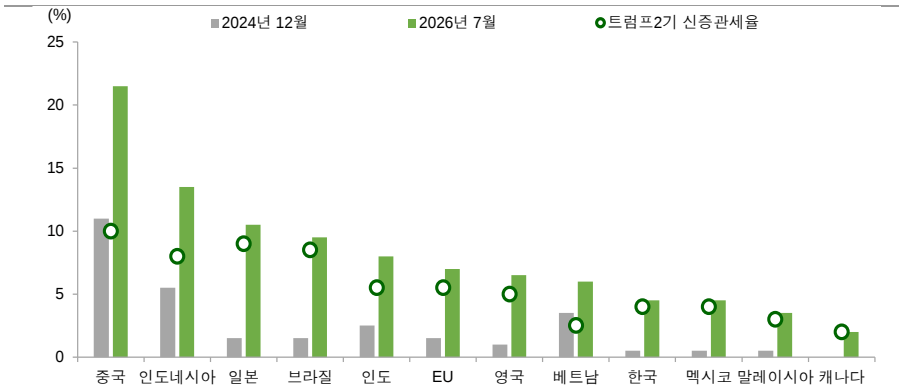
자료 : USIT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비민감 품목 상호관세 인하에 따른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영향 제한적

중국 정부가 발표한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 및 관세 인하폭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세 인하 대상 상품이 2025년 중국의 대미 수출(약 3,086.5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다. 대상 상품의 평균 관세율 인하폭을 10~20%p로 가정하면, 전체 대미 수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관세 부담 감소 효과는 약 1.0~1.9%p 수준이다. 다만 실제 실효관세율 하락폭은 품목별 수출 비중과 관세 인하폭, 수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소가전 제품의 최혜국대우 세율은 2%~5%이며, 301조 관세 조정후 2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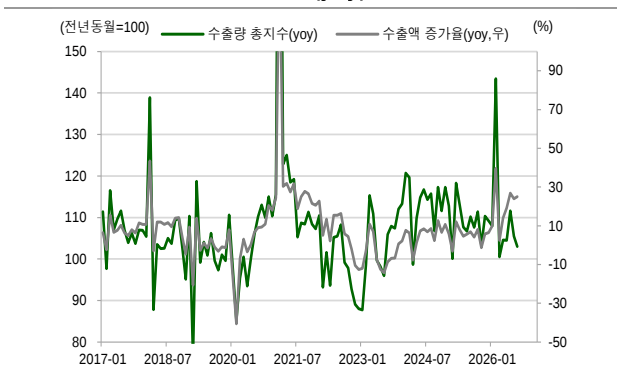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상호 관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글로벌 국가 중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글로벌 국가 평균 7.6%)은 가장 높다. 실제 관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도 크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력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6년 수출 증가율은 19.3%(8월 YTD)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도표 2. 글로벌 국가 중 중국 대미 실효관세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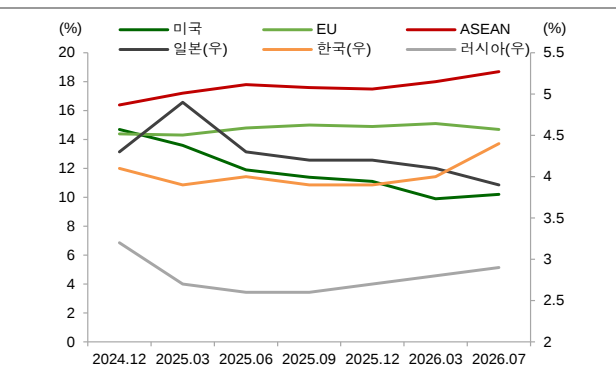
자료 : USIT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6년 중국 수출 증가율(yoy) 19.3%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중국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미국↓, ASEAN/한국/EU ↑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1월 이후 선별적 관세 조정 가능성에 주목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가 결정됐으나, 11월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관세 연장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2027년 1월 관세 연장 종료를 앞두고 11월 3일 미국의 중간선거와 10월 26일~29일 중국 5중대회 등 굵직한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관세'는 조정(인하 혹은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11월 18일 APEC(중국), 12월 G20(미국)에서 추가 회담은 중요하다.

이번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합의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의 긍정적인 신호지만, 전체 대중국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에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향후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의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중국 과잉생산 문제)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반도체, 조선/방산 산업 문제)에 따른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은 일반 소비재와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면서도, 중국과의 기술·산업 경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관세 장벽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